



길 찾기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동운동의 개혁을 위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이 혼돈과 미망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가혹한 표현일까. 아무튼 전략목표도 뚜렷한 형태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당면 과제들에 대한 대응방해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시점이다. 정작 노동운동 전선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거대 도전 앞에 서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3일 대의원대회에 내놓은 〈99년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하반기 정세를 개괄했다. 주요 대목을 간추리면 이렇다. “김대중 정권의 국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노동자 민중의 회생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어 노동자 민중을 포섭하는 일이 쉽지 않고, 재벌 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내 재벌을 압박함으로써 구체적 지점에서는 국내 재벌하고도 힘 겨루기를 계속해야 하며, 복잡하게 얹혀 있는 이해집단을 통합할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투쟁은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실정이다. 투쟁 시기를 별도로 설정하는 일이 투색할 만큼 크고 작은 투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길증시켜 전체적 투쟁으로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정세 진단은 공감을 넓게 확보할 정도로 명확해 보이지는 않지만, 정세의 주요 국면을 드러내고는 있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는 어느 면에 비춰서도 실로 만만치가 않다. 노동운동에 다가선 도전이 엄중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어쩌면 노동운동이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도전인지도 모른다. 세계화 또는 지구촌화는 노동운동으로서는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해일(海溢)처럼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세계자본주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편입되어 마구 휘둘리는 형국이다. 실상 한 나라 노동운동으로 대처하기에는 무척 힘겨워 보인다. 국경을 뛰어넘은 초국적자본은 그 옛날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스칸처럼 시장과 자원을 찾아 세계를 배회한다. 인류는 세계자본주의의 백성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는 본질에서 ‘자본의 세계화’ 이면서 ‘빈곤의 세계화’와 ‘불평등의 세계화’라는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노동운동의 국제연대가 다양한 형태로 모색되고는 있으나, 자본의 세계화가 취하는 공세에 맞서기에는 그 대응력이 턱없이 취약한 편이다. 안타까운 일이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의 처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권이 시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또 어떤가. 노동운동으로서는 마치 독약처럼 무서운 존재다. 하기야 독약도 약이 될 수도 있을 터이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약으로 활용할 자율적 선택의 여지마저 켜 보이지 않는다.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운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철폐,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대외 개방화 등이 노조운동으로서는 대응하기 힘든 공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실은 1998년 이후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경험해 온 일이다.

또 있다. 자본의 경영전략이다.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통제와 지배의 강화를 목표로 한 ‘경영합리화’는 자본의 본래 속성이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자본족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등에 엎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경영합리화 전략을 추진한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에 대해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선다. 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등을 통한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 성과와 능률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현장 통제 강화, 기업문화의 보급 확대 등이 그 방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 정세도 노동운동에 결코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정치적으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과 충돌이 확대됨으로써 정치적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노조운동도 대응력을 키워 가고는 있으나, 노동운동 발전을 제약하는 거대 도전들은 오히려 구조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동운동으로서는 물러설 여지라고는 없어 보인다. 노동운동의 하반기 과제는 그래서 막중하다 할 것이다.

물음을 더듬자

도전이 거대하고 과제가 막중하면, 자칫 노동운동의 나아갈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물음을 더듬어 떠올리는 일이다. 진지한 물음은 해답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또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실한 고민과 광범한 토의 그리고 집중된 학습활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근거없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허상을 깰 수 있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여 그 변화를 읽어내기조차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은 변화하고 있는데도 활동방식이나 운영내용이 낡은 틀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후이고 퇴보이며 패잔의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장구한 역사에서 축적된 원칙을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이 존중되는 가운데 치밀한 상황 진단과 대중토의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행동방식을 이끌어야 한다.

무릇 노동운동이 위기 국면에 놓이게 되면, 흔히 타협주의와 경제주의가 합리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모험주의와 맹동주의가 한껏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분파주의가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일 반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국중앙조직 차원에서 총노선이 설정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운동기조가 분파주의 극복을 위한 행동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각급 조직 차원에서 대중토론

도전이 거대하고 과제가 막중하면, 자칫 노동운동의 나아갈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물음을 다듬어 떠올리는 일이다. 진지한 물음을 해답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견해와 주장을 집약해 나가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특히 현장토론을 통한 민주집중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황량한 겨울 대지와도 같이 메말라 보이는 노동운동 풍토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생명력 넘치는 '운동판'으로 바꾸어내는 일 역시 더할 데 없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의 권위를 확립해야

지금 노동운동의 권위는 과연 살아 있는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하다. 조직역량, 투쟁역량, 정치역량, 자주적 규율, 총노선 등 여러 요건들이 노동운동의 권위를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체제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지배세력과 모순과 갈등을 빚게 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권세와 위력을 확고히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위는 낮은 차원에서 볼 때 체통과 품위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노동운동의 사회적 위상은 경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 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때로는 노동운동이 '싸움꾼'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사회 세력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확립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노동운동이 본래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동운동이 무엇보다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이다.

여기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조직의 확대 강화이고, 특히 조직운영과 조직형태의 개혁이 시급하다. 노조운동은 미조직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직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확

대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조직형태의 개혁은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산별노조운동 추진은 조직에 따라 속도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계획이나 논의에서부터 조직결의, 기구구성, 필요한 사업 추진, 조직개편에 이르기까지 안팎의 조건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시급히着手해야 한다. 조직형태의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산별노조 확립 이전에도 노조 조직운영은 전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결정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중앙조직과 산별조직, 지역조직, 기업단위 노조, 지부, 현장조직 등 각급 조직의 기능 설정과 체계 확립이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조직운영에서 업무집행을 비롯해 회의, 재정, 일상활동 따위에서 합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전국조직의 대의원 대회가 매번 늦게 시작되는 따위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조직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개혁에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민주집중제의 활성화, 현장활동의 기본방침 설정과 실천, 조직민주주의의 철저한 실현 등이 될 것이다.

'싸움꾼'으로는 안된다

민주노총이 제15차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99년 하반기 투쟁방향과 목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1) 노동시간 단축: 99년 정기국회에서 주 40시간 법제화 관철, (2) 노동악법·국가보안법 철폐: 99년 정기국회에서 관철, (3) 사회보장제도 개혁 투쟁, (4)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와 불법·부당노동행위 완전 척결, (5) 재벌개혁 및 정치개혁과 노동자정치 세력화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지난 99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사업방향과 목표는 (1) 고용·임금안정 확보, (2) 사회개혁, (3) 산별노조 건설 및 조직의 확대·강화, (4)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전선의 강화 등이었다.

물론 이러한 당면 투쟁목표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의 전략 목표를 확고히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초 한 문건에서

조직형태의 개혁은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산별노조운동 추진은 조직에 따라 속도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안팎의 조건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전략목표를 '한국자본주의의 근본적 개혁'에 두고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표명한 적이 있었다. 한국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나 위기의 본질에 비추어 민주노총의 전략목표 설정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배치되는 국내외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자본축적 구조 및 권력행사를 민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주의의 목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함께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한다. 그것은 대외종속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축적구조를 개혁적이고 자립적인 축적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현시기에 제기되는 경제민주주의 과제는 경제정책의 민주적 개혁, 재벌해체와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국영기업과 공기업 및 국민기업 확대, 경제평등 실현, 정책과 제도 개혁, 노동자와 민중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 확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리 보장 등이 될 것이다(김금수, 「IMF관리체제와 노동운동의 전략」, 『노동사회』, 1998년 2월호).

한편으로, 99년 하반기 주요 투쟁과제로서는 (1) 고용·노동조건 보장, (2) 노동자의 기본권리(노동권, 생존권, 노동3권,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 확보, (3) 사회개혁(정책과 제도의 개혁), (4)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세력화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말아야

지난 8월 29일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발기 취지문의 앞

대목은 이렇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 분단, 군사독재, 독점재벌의 지배에 맞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 수립과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민중들이 영웅적으로 건설해온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진보정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돌입함을 선언한다.”

이제 노동운동 진영은 장구한 세월에 걸친 정치세력화 운동의 단절과 실패의 역사를 딛고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1987년 노동항쟁 아래 크게 성장한 노동운동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조직적 결정을 통해 정치세력화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의의를 갖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추진주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노동자계급과 노조 그리고 노동운동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계급의 배타적 방식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노동자 계급을 주축으로 하고 민중세력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주도세력으로 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체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인 정당의 성격은 노동자 주축의 정당, 사회개혁적 진보정당, 대중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정당은 합법 정당이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벌이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 정당은 다른 민중운동과 사회운동, 민족민주운동, 시민운동, 여타 동조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추구할 전략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전략목표는 한국사회의 모순구조와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노선 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 목표는 한국사회의 전면적 또는 근본적 개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한 현단계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기목표와 정치운동 방침 그리고 단계적 실천계획을 확립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벌이는 대중투쟁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다른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정치적 동맹이나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

노동운동이 자기발전을 위한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밀고 나갈 추진주체의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노동운동 진영의 뜻 있는 이들이 분명한 풋대를 세우고 분발할 때다.

배세력과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자본 진영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교육과 선전활동을 광범하게 실시해야 하며, 특히 지역조직의 기능 강화와 지원 차원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가야만 한다.

노동운동 미래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기 위한 과학적인 아념과 노선의 정립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총노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가 '셉템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연구, 면담, 포럼을 통한 토론과 제안, 브로인스토밍과 분석, 그리고 현장토론을 거쳐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이끈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셉템버위원회의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제3기 지도부 단일 후보인 단병호·이수호 팀이 내놓은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설치 구상을 주목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진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노동운동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 역시 민주주의와 인간화를 향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자본이 판치는 '시장의 정글'로 퇴보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이 자기발전을 위한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을 밀고 나갈 추진주체의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노동운동 진영의 뜻 있는 이들이 분명한 풋대를 세우고 분발할 때다. ♦